



해양부, 부산신항 연내개장 차질없이 진행 경쟁력강화위원회 3차 회의서 현안 논의 5월말 현재 조기개장 3선석 공정률 83%

정부는 6월22일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지자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부산·광역항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부산신항 개장 준비 등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부산신항 개장과 관련해선 지난 2월부터 부산 지방해양수산청에 구성운영중인 '부산신항 개장 준비 현지 점검단'을 중심으로 개발 공정을 꼼꼼히 점검, 5월말 현재 북컨테이너 조기개장 대상 3선석 공정률이 83%에 이르러 올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기 개장되는 부산신항만(PNC) 운영인력은 북항 재개발 등에 따른 항운노조 잉여 인력을 최대한 채용토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부산신항 매립지 행정구역 획정이 지연될 경우 토지 등록 등 후속 절차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조기개장 대상 북측 컨테이너 3선석 등에 대해 빠른 시일 내 토지와 장비 등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시·도를 결정한 후, 관련 세금 등을 공탁기로 했다.

신항과 관련한 전체적인 매립지 행정구역 획정은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추진중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 검토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기로 했다.

경남도가 당초 F1 부지로 활용키로 한 40만평 토지이용 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상황 변동이 생긴 용동지구 토지 이용계획은 재정부와 빠른 시일내에 필요 레저 단지 및 물류부지 면적 등에 대해 협

의한 후, 해양부에서 오는 7월부터 실시 예정인 전국 주요항만 배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반영해 최종 확정기로 했다.

부산 북항 일반부두 재개발과 관련해선 1·2부두, 중앙부두, 3·4부두 까지를 포함한 전체 개발계획을 마련하되, 부산항에 미치는 물류 영향을 감안해 재개발 시기는 여건 충족여부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1·2부두는 낙후된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이 시급함에 따라 2008년초 우선 재개발하자는 데 잠정 합의했다. 보다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현재 BPA에서 수행하고 있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올해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북항이 재개발됨에 따라 ODCY도 단계적으로 폐쇄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공청회 등을 거쳐 물류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결정기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된 안건을 공청회 등을 통해 보다 구체화해 부산항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항만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